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 · 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사라 에버라드(Sarah Everard) 사건과 영국의 여성 보호 정책¹⁾

- 2021년 3월 초 영국 런던에서 30대 여성 사라 에버라드가 집에 가던 길에 납치돼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해 영국 전역으로 추모 집회가 확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부와 의회는 여성 혐오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 중이다. 본론에서는 먼저 사라 에버라드 사건 발생 직후 영국 정부가 내놓은 여성 보호 정책을 분석한다. 이어서 경찰이 범행 동기를 수사할 때 여성 혐오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주요 동기가 됐는지 의무적으로 조사해 기록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된 가정폭력 법안(Domestic Abuse Bill)을 분석해 해당 법안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사건 이후 영국 정부, CCTV 조명 설치 확대하고 경찰권 강화
 - 2021년 3월 3일 귀갓길에 실종된 33세 여성 사라 에버라드가 실종 10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영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사건 용의자가 현직 경찰로 밝혀지고, 경찰 당국이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 머물라는 지침을 내리자 영국 여성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전국적인 집회로 이어졌다. 이는 2015년 서울 강남역 근처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돼 추모 열기가 달아올랐던 ‘강남역 살인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 영국 전역으로 여성들의 분노가 퍼지자 2021년 3월 15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직접 여성 보호 정책을 내놓았다.
 - 먼저 영국 정부는 ‘Safer Streets’ 예산을 기존 2,000만파운드(한국 돈 약 311억 5,000만원)에서 두 배 이상인 4,500만파운드(약 700억 8,000만원)로 늘렸다. 2020년 1월 처음 시행한 이 정책은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우범 지대 52곳에 CCTV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범지대는 공원과 골목길,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 등 늦은 밤 문을 여는 영업 시설과 이어진 길 등을 포함한다. 영국 내무성(Home Office)가 2021년 1월 발표한 보고서 ‘Safer Streets Fund (2021-2022) Prospectus’에서 “우범지대에서 발생하는 절도, 강도, 성범죄 같은 범죄들은 거리 조명이 밝아지고, CCTV 개수가 늘어나 범죄자들이 검거될 가능성이 커지면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이와 함께 'Project Vigilant'라는 시험 정책을 내놨다. Vigilant는 영어로 빈틈없는 경계를 뜻한다. 이 정책은 정복, 사복 경찰이 함께 여성 피해자를 노리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돌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용의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들이 클럽이나 술집에서 잠복하며 여성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술집이 문을 닫는 시간에 순찰 경찰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내무성 보도자료를 통해 "사라 에버라드 사건 이후 많은 여성이 밤길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거리에 경찰과 CCTV 숫자를 늘리고, 여성들이 집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길을 더 밝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경찰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정안이 여성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힘만 키워준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다. 야당인 노동당 당수 키어 스타머는 경찰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영국 정부의 정책은 "의미 없는 정책"이라며 "관련 법안을 재검토해 사법제도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찰, 앞으로 범행 동기 파악할 때 '여성 혐오' 주요 동기인지 반드시 조사해야
 - 사라 에버라드 사건을 계기로 혐오 범죄(hate crime)에 여성 혐오(misogyny)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1998 범죄장애행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28~32항과 2003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 2003) 145항, 146항에 각각 명시돼 있는데, 영국 경찰과 검찰은 누군가가 장애, 성전환자 신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때문에 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에만 혐오 범죄로 인정한다. 현행법에 따라 여성 혐오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이와 별도로 여성 혐오를 혐오 범죄에 포함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는 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은 3월 15일 가정폭력 법안(Domestic Abuse Bill)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경찰이 범행 동기를 수사할 때 여성 혐오가 범죄를 저지르는 주요 동기가 됐는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3월 25일 기준으로 해당 조항이 포함된 가정폭력 법안은 영국 상원을 통과했으며, 최종 관문인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앞두고 있다. 현재 혐오 범죄의 정의를 담고 있는 1998 범죄장애행법과 2003 형사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개정 내용이 포함된 가정폭력법이 제정되면 여성 혐오가 혐오 범죄로 인정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이 조항을 만든 엘리시아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 되면 경찰은 스토킹, 성추행, 성폭행 등 모든 범죄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는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영국에서 유일하게 경찰이 자체적으로 여성 혐오를 혐오 범죄에 포함해 수사하는 곳은 노팅엄셔 주(Nottinghamshire)다. 이곳 경찰은 2016년 4월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스토킹 등 범죄에 여성의 성별이 주요 범행 동기가 됐는지 별도로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 가정폭력 법안에는 이외에도 '스토커 등록제(Stalkers' registry)'를 도입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스토킹을 한 이들을 별도로 등록해 감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영국 정부는 사라 에버라드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여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정책에 4500만파운드 예산을 투입했고, 경찰력을 확대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모임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영국 전역에서 집회가 열릴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직접 나서 신속하게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과 맞물려 경찰이 범행 동기를 수사할 때 여성 혐오를 별도로 분류해 기록하는 가정폭력법도 곧 법안 제정을 앞두고 있어 사라 에버라드 사건이 영국의 여성 보호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UK Parliament(2021.3.25.), "Domestic Abuse Bill", <https://bills.parliament.uk/bills/2709> (접속일: 2021.3.25.)
- Home Office (2021.1.), "Safer Streets Fund (2021-2022) Prospectu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57227/SSF_R2_Prospectus_FINAL.pdf (접속일: 2021.3.25.)
- The Guardian(2021.3.17.), "Police will be required to record crimes motivated by hostility to women - minister",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1/mar/17/pmq-sarah-everard-killing-must-be-a-turning-point-says-starmer> (접속일: 2021.3.25.)
- The Guardian(2021.3.15.), "Domestic abuse bill: what amendments are peers voting o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mar/15/domestic-abuse-bill-what-amendments-peers-voting-on> (접속일: 2021.3.25.)
- BBC(2021.3.15.), "PM defends policing bill amid criticism it fails to protect women",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6399860> (접속일: 2021.3.25.)

영국의 스토킹 피해 관련 법제도 및 현황

- 영국에서는 2016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한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의심 범죄가 발생 시 경찰이 초기 개입을 허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담은 스토킹 보호법(Stalking Protection Act)가 2019년이 제정됐다.
- 본론에서는 먼저 스토킹 보호법 제정 배경과 법의 주요 내용, 해당 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스토킹 보호법에 포함된 스토킹 보호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s)을 중심으로 경찰이 언제 어떻게 스토킹 의심 범죄에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경찰 권한 강화한 스토킹 보호법(Stalking Protection Act) 제정
 - 2019년 3월 15일 제정된 영국의 스토킹 보호법은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스토키를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범죄 피해가 발생해야 경찰이 개입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의심 사건에 경찰의 초기 개입이 가능해졌고 스토킹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보호 명령(protection)을 사용해 스토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경찰의 보호 명령은 최대 2년까지 유효하며, 스토키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년형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 이 법이 제정되기 전 영국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고 경찰의 초기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계기가 있었다. 2016년 10월 26세였던 앨리스 러글스는 헤어진 뒤 스토킹했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었고, 가해자는 22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뒤 앨리스가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 받은 경찰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초동 조치가 논란이 됐다. 2021년 4월 26일 페미사이드(femicide)를 중점적으로 보도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앨리스의 신고를 받고도 가해자를 만나거나 이야기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앨리스의 가족은 딸의 이름을 따 'The Alice Ruggles Trust'라는 자선 단체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와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 경찰 스토킹 보호 명령, 과거 스토킹 범죄 혐의 없어도 경찰이 개입 가능
 - 2019년 스토킹 보호법이 제정된 뒤 2020년 1월부터 경찰의 초기 개입을 허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 보호 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s)이 도입됐다.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이 2021년 1월 경찰을 대상으로 배포한 ‘스토킹 보호 명령, 경찰 개입을 위한 법적 지침(Stalking Protection Orders, Statutory guidance for the police)’은 언제 어떻게 경찰이 스토킹 의심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내무성은 “경찰이 스토킹 보호 명령을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사용하고, 스토킹 행동에 숨겨진 동기를 파악해 스토킹이 다른 범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 지침을 발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 영국에서 스토킹의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다. 하지만 영국 검찰(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에 따르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집착하는 행동을 지속해서 행하고,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이나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를 검찰과 경찰 모두 스토킹으로 인정한다.
 -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경찰은 스토킹 보호 명령을 사용하기 전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가해자가 스토킹을 하는지,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토킹 보호 명령을 사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경찰이 스토킹 보호 명령을 사용할 때 피해자가 과거 스토킹 피해 경험이 없거나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기 전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 임시 명령(Interim Orders)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스토킹 보호 명령은 최대 2년까지 유효하고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명령(Full Orders)이라면, 임시 명령은 지속 기간은 짧지만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돼 경찰이 사건에 더 빨리 개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시 명령은 스토킹 피해 때문에 피해자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위협이 있으면 경찰이 최대한 빨리 개입하기 위해 사용된다.
- 경찰 권한 강화한 보호 명령 승인 시 가해자는 소셜 미디어로도 피해자 접촉 불가
 - 법원이 보호 명령을 승인하면 스토킹 가해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방문하는 곳에 접근 금지 2)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등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3)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 금지 4) 소셜 미디어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금지 5) 가정법원을 포함한 법원에 피해자를 언급한 악의적인 소송 제기하는 것 금지 6) 피해자가 등장한 영상 녹화 금지 7) 인터넷 사용 내용을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치 사용 금지 8) 피해자 감시 금지
 - 이외에 가해자를 개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심리 상담, 약물 알코올 중독 상담 치료, 범죄 예방 목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경찰이 강제할 수 있다.
 - 지난해 4월 30일 케임브리지셔 경찰은 스토킹 보호 명령 도입 이후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예를 공개했다. 이별 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34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3개월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 영국 정부와 의회는 2019년 스토킹 보호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스토킹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강화했다. 스토킹 보호법과 함께 도입된 스토킹 보호 명령에 따르면 과거 스토킹 피해 경험이 없거나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즉각적인 개입할 수 있는 임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스토킹 보호 명령이 도입된 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스토킹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Legislation.gov.uk (2019)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9/contents/enacted> (접속일: 2021.04.27.)
- GOV.UK. (2021.01.) "Stalking Protection Orders, Statutory guideline for the poli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lking-protection-act-statutory-guidance-for-the-police> (접속일: 2021.04.27.)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2020.01.20.) "Stalking Protection Orders",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stalking-protection-orders> (접속일: 2021.04.27.)
- BBC (2021.3.10.) "Stalking protection orders: Police 'not using' new powers to protect victims", <https://www.bbc.com/news/uk-wales-56327375> (접속일: 2021.04.27.)
- The Guardian (2021.04.26.) "The UK's femicide epidemic: who's killing our daughter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apr/25/the-uks-femicide-epidemic-whos-killing-our-daughters> (접속일: 2021.04.27.)
- Cambridgeshire Constabulary (2020.04.30.) "Cambridgeshire's first Stalking Protection Order granted", <https://www.cambs.police.uk/news-and-appeals/cambridgeshires-first-stalking-protection-order-granted> (접속일: 2021.04.27.)

영국의 1인 가구 현황과 관련 정책

- 영국에서는 지난 20년간 1인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런던은 전체 가구 중 23.9%, 스코틀랜드는 35.0%가 1인 가구일 정도로 영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먼저 공식 통계를 통해 영국의 1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현황을 알아보고,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와 비교해 혼자 사는 데 드는 비용을 분석한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코로나19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영국 1인 가구 비중, 지난 2년간 20% 증가
 -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영국 국민은 820만 명으로 20년 전인 2019년(680만명)에 비해 20.5%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29.5%에 달하는 수치로 한국과 유사하다. 통계청은 이런 증가 추세를 견인한 집단이 45~64세 성인 남성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이 분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평생 결혼하지 않는 비혼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고, 남성은 여성보다 더 늦게 결혼하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더 어린 배우자를 만나는 경향이 있고, 이혼하면 주로 남성이 혼자 살고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영국의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지역별로 달랐다. 지난 5년간 잉글랜드 남서 지역(South West of England) 23.2%, 북아일랜드 22.5%, 웨일스 22.1%씩 1인 가구 비율이 늘 만큼 상승세가 가팔랐다. 이와 함께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로 따로 살펴보면 영국 평균은 29.5%이지만 스코틀랜드가 35%로 평균을 웃돌았고, 웨일스와 잉글랜드 북동 지역(North East of England)가 각각 32.1%, 요크셔 험버 지역

- (Yorkshire and The Humber)이 31.6%로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대도시인 런던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23.9%로 평균보다 5.6% 포인트나 낮았다.
- 통계청은 런던의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낮다는 점도 주목했다. 영국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49.1%로 전체의 절반을 육박하지만, 런던은 그 비율이 38.3%로 상대적으로 젊은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도시다. 하지만 버밍엄 등 도시가 포함된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West Midlands)은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1인 가구의 54.7%에 달해 런던과 대조를 이룬다. 지역별로 1인 가구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영국 통계에서 가족의 개념은 포괄적이다. 통계청은 “자녀 유무를 떠나 결혼, 사실혼(civil partnered) 또는 동거(cohabiting)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 커플, 자녀가 최소한 한 명이 있는 한부모 가족이 한 주소에 살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멀티 패밀리 가구(multi-family household)란 두 가족 이상이 함께 모여 사는 가구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가족 A와 가족 B가 주방이나 공용 시설을 공유하며 한 주소 아래 살 경우 멀티 패밀리 가구라고 할 수 있다.

〈영국 가구 유형에 따른 가구 비율〉

가구 유형	비율
커플 가구	57%
1인 가구	29.5%
한부모 가구	9.7%
가족이 아니지만, 함께 사는 2인 이상 성인 가구	2.8%
멀티 패밀리 가구	1.1%

출처: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9

- 런던은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사는 2인 이상 성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2019년 기준으로 영국 전체에 이 가구 수는 총 787,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8%를 차지하지만, 런던은 전체 가구 중 이 가구의 비율이 6.2%(206,000가구)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돈다. 커플이나 부모와 함께 사는 이들은 제외되며, 친구 또는 학생들끼리 함께 모여 살거나 형제자매가 같이 살 때 이 가구 형태로 분류한다. 한국으로 치면 ‘셰어 하우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 혼자 사는 비용, 2인 가구보다 비싸
 - 혼자 사는 비용을 분석한 통계도 있다. 영국 통계청이 2019년 4월 발간한 보고서 ‘혼자 사는 비용(The cost of living alone)’에서 25세 이상 64세 이하 영국 성인 남녀 소비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의 92%를 사용해 2인 가구가 83%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소비 비중이 높았다. 가처분 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을 제하고 남아 저축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만큼 1인 가구는 2인 가구보다 씹씀이에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월세에 살 가능성이 크고, 자녀가 없는 2인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1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 사용 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 1인 가구의 내 집 마련 비율도 자녀가 없는 2인 가구보다 낮았다. 경제적 활동이 활발

한 35~44세 연령대를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2인 가구 자가 소유 비율은 67%에 달했지만, 1인 가구는 48%로 19%나 낮았다. 또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55~64세 연령대를 봐도 자기 집이 있는 1인 가구는 57%, 자녀가 없는 2인 가구는 87%로 격차가 났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1인 가구는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에 비해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자산을 축적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낼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코로나19 시대, 1인가구 정책 지원 버블(support bubble)

- 영국 정부는 영국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9월, 지원 버블(support bubble)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 버블이란 최대 두 가구를 연결해 봉쇄 기간에도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영국은 봉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거나 이웃집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버블로 연결된 가구는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새로운 가구와 버블을 형성하고 싶다면 기존에 연결됐던 가구와 10일간 접촉을 금한 뒤 새 가구와 연결할 수 있다.
 - 하지만 모든 가구가 지원 버블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인 가구,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 장애가 있는 가족과 사는 성인, 한 살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가구, 5세 이하 장애아가 있는 가구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영국 전체 가구 30%가 1인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혼자 오랫동안 사회적 접촉 없이 고립돼야 하는 1인 가구에 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 코로나19 관련 정책과 별개로 영국에서 1인 가구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 있다. 주택 가치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인 카운슬 텍스(Council Tax)를 25% 깎아준다. 영국에서는 single-person discount라고 알려져 있다. 카운슬 텍스를 책정할 때 재산세(property tax)의 50%, 주민세(residential tax)의 50%를 기준으로 하는데, 주민세 비율 50%는 한 집에 두 명이 산다는 기준 아래에 책정된 것이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주민세 비율이 25%로 줄어들며, 17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 가구, 연령에 상관없이 풀타임 학생과 함께 사는 가구 등도 50%까지 카운슬 텍스를 할인받는다.
- 영국은 지난 20년간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0% 가까이 차지한다. 또한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1인 가구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영국 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해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지원 버블 같은 정책을 펼친 것은 혼자 오랫동안 사회적 접촉 없이 고립돼야 하는 1인 가구를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9.11.15.), "Families and households in the UK: 2019",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families/bulletins/familiesandhouseholds/2019> (접속일: 2021.05.27.)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9.04.04.), "The cost of living alone",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families/articles/thecostoflivingalone/2019-04-04> (접속일: 2021.05.27.)
- GOV.UK(2020.09.09.), "Making a support bubble with another household", <https://www.gov.uk/guidance/making-a-support-bubble-with-another-household>(접속일: 2021.05.27.)
- BBC (2021.01.06.), "Support bubbles: How do they work and who is in yours?", <https://www.bbc.com/news/health-52637354> (접속일: 2021.05.27.)
- GOV.WALES "Council Tax discounts and reduction", <https://gov.wales/council-tax-discounts-and-reduction/living-alone> (접속일: 2021.05.27.)
- The London Borough, "Council Tax discounts and exemptions", https://www.bromley.gov.uk/info/59/council_tax_discount/119/council_tax_discounts_and_exemptions (접속일: 2021.05.27.)

독일 연방정부, '성평등 재단' 설립²⁾

- 독일 연방정부가 '성평등 연방재단(Bundestiftung Gleichstellung)'을 설립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3월 10일 성평등 강화 및 증진을 목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 단체, 시민사회와 학술 및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성평등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올해 안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성평등 연방재단은 구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 운영 목표를 두고 있다.
 - 성평등과 관련한 정보제공센터 : 독일의 성평등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잘 준비된 정보를 제공한다. 성평등이 실현된 곳과 여전히 여러 조치가 필요한 곳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수집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형식은 출판물 발행과 워크숍 개최, 다양한 문서 제공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필요한 경우 연구 계약을 체결한다.
 - 연방정부의 성평등 전략실 : 성평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시민 사회, 학계 및 기업 쪽과 협력해 실질적인 성평등 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정부(지역)별로 평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할 '성평등 담당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연방정부 부처 간 성평등 전략 실행에 대한 자문도 이어간다.
 -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실 :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한다. 예를 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와 대화의 장 마련, 평등의 날 조직, 평등정책협의회 조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성평등을 위한 오픈 하우스 : 성평등과 관련한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재단은 네트워킹 플랫폼과 함께 공동작업공간(코워킹 스페이스)을 운영할 예정이다.
- 연방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재단 설립을 알리며 특히 재단은 사회와 정치, 경제 및 과학 분야에 여성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는 데 집중할 것으로 발표했다. 재단 설립을 위한 연방 예산은 이미 할당된 상태다. 2021년에는 연방 재단에 최대 3백만유로(약 39억 9,924만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부터 매년 5백만유로의 예산을 지원한다. 재단 설립을 위해 독일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라 올해는 이사회 임명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평등 재단의 신속한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성평등 재단이 설립되기로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2018년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2020년 말까지 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 85개 시민 사회 단체와 독일여성단체협의회(Deutscher Frauenrat) 등은 "실질적 성평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다루는 지식이 필요하며, 전문가를 통해 전략을 개발하고 토론을 이끌어 갈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며 "성평등 재단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재단을 꾸리는 데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 성평등 재단 설립은 독일 역사상 처음 이뤄지는 연방 정부 부처 간 '성평등 전략(Gleichstellungsstrategie)' 프로젝트로, 이 전략은 2020년 7월에 채택됐다. 독일 연방정부의 첫 성평등 전략은 크게 9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BMFSFJ(2021), www.gleichstellungsstrategie.de (접속일: 2021.03.25.)

Bundesregierung(2021.03.10.), "Ein Haus für die Gleichstellung", <https://www.bundesregierung.de/>

breg-de/aktuelles/bundesstiftung-gleichstellung-kabinett-1861042 (접속일: 2021.03.24.)
 ver.di(2021), "Gleichstellungsstiftung jetzt gründen!", <https://frauen.verdi.de/themen/gleichstellung/++co++9811a2e2-c137-11ea-8c73-001a4a160100> (검색: 2021.03.25.)
 BMFSFJ(2021.03.10.), "Ein offenes Haus für die Gleichstellung in Deutschland",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ein-offenes-haus-fuer-die-gleichstellung-in-deutschland-174258> (검색: 2021.03.25.)

독일의 스토킹 피해 관련 법제도 및 현황

- 현재 독일 하노버 지방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독일 중부 테사우라는 도시에서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게 고백했고, 피해자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그는 몇 년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하루에 200번 이상 전화를 걸고 소셜네트워크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 여성을 모욕했다. 2020년 초, 가해자는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욕실에서 피해자를 찔러 죽였다.
- 독일에서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니더작센주에서는 2019년 이전보다 현재 더 많은 스토킹자가 법원에 의해 형을 선고받았다. 하노버 법무부는 지난해 총 43명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43명 중 남성은 37명이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사건 중 피해자 16,432명이 여성이었고 남성은 3,772명이었다(2019년 기준).
- 독일에서 스토킹 행위는 2007년부터 독일 형법 23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상대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자에게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된다. ▲상대에게 물리적인 (공간)근접성을 찾고 ▲통신 수단이나 기타 수단 또는 제3자를 통해 접촉을 시도한 행위 ▲상대의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그 사람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제3자가 상대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한 경우 ▲상대의 생명, 신체 안전, 건강이나 자유 또는 상대 친척이나 상대와 가까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경우 ▲또는 다른 유사한 행위. 이와 함께 피해자나 피해자 친척 또는 가까운 사람을 사망 또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에 빠뜨리면 3개월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어 상대나 상대 친척 또는 상대와 가까운 타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최대 10년 징역에 처한다.
- 독일의 폭력 방지법(Gewaltschutzgesetz)은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친밀한 파트너, 지인 및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 의한 신체적 폭력, 위협 및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다. 폭력방지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고의로 해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법적 명령은 기한을 두며,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집에 들어가거나 ▲피해자 집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 머무르거나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장소를 방문하거나 ▲피해자와 접촉하기 위해 여러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법원은 법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스토킹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접근금지명령이나 개인적으로 전화나 편지, 타인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접촉금지명령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법적 보호명령은 담당 가정법원에 요청해야 한다.
- 독일에서 위와 같은 스토킹에 관한 처벌 법안은 2017년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은 이제 '피해 입은 사람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그러한 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공해야 했다. 예를 들어 법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피해자가 거주지를 강제로 옮기거나 일터를 바꿔야 했다.

- 지금도 독일에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 고소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폭력 피해 여성 상담소 및 긴급전화 연합(Bundesverband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이하 BFF)’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자료집을 발행했다. BFF 연합에는 180개 이상의 성폭력 위기 센터와 여성 상담 센터가 속해 있으며,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지원 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실시하고 실무 및 연구를 통해 관련 전문 지식을 전달한다.

• 참고문헌 •

독일 형법 238조,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238.html (접속일: 2021.04.24)
 독일 폭력방지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gewschg/BJNR351310001.html> (검색: 2021.04.24.)
 statista(2020.12.08.), “Frauen sind häufiger Opfer von Stalking”, <https://de.statista.com/infografik/5233/frauen-haeufiger-opfer-von-stalking> (접속일: 2021.04.20.)
 폭력 피해 여성 상담소 및 긴급전화 연합 브로셔, “WAS TUN BEI STALKING?”, <https://www.frauen-gegen-gewalt.de/de/infotlyer-fuer-betroffene-und-bezugspersonen/was-tun-bei-stalking-information-und-hilfe.html> (접속일: 2021.04.20.)

독일의 한부모 가정 현황 및 지원정책

- 독일의 가족 형태 중 한부모 가정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2021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800만 가구 중 약 19%가 한부모 가정이다. 2019년 기준으로 독일의 전체 아동 5명 중 1명은 한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다. 1996년과 2018년 사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130만 가구에서 150만 가구로 증가했다. 한부모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자녀 1명(56%)을 키우고 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은 33.3%다. 3명 이상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전체 한부모 가구 중 10.8%였다.
-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는 대개 어머니(134만 명)이며, 한부모 가구 중 엄마와 자녀 1명이 살거나(48.3%) 엄마와 자녀 2명이 사는 비율(29.9%)이 가장 높았다. 한부모 가구는 동독 전체 가구의 18.6%를 차지하며 서독에서는 전체 가구의 12%를 이루고 있다. 독일에서 결혼한 부부의 자녀 수와 한부모 가정의 자녀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혼한 부부가 키우는 미성년 자녀 수는 평균 1.74명이었으며 한부모 중 아버지가 키우는 자녀 수는 평균 1.33명, 어머니가 키우는 자녀 평균 수는 1.45명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일·가정 양립을 지키면서 생계 일을 꾸려가는 건 한부모 가정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의 68%가 취업 상태에 있지만, 많은 한부모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2018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의 약 38%가 사회법 제2법전(Sozialgesetzbuch, SGB II)에 따라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약 59만 가구에 이르는데 무엇보다 빈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문제다. 이에 독일에는 여러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이 있다. 주로 지원금을 지급해 재정 상황을 돕거나, 사회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정책 종류는 양육비/생계비 선지급(Unterhaltsvorschuss),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 한부모 가정 지원금(Entlastungsbetrag für Alleinerziehende), 아동보너스(Kinderbonus)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2021.03.23.), "Alleinerziehende nach Geschlecht" <https://www.bpb.de/nachschlagen/zahlen-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581/alleinerziehende> (접속일: 2021.05.13.)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1.01.18.), "Allein- und getrennt Erziehende fördern und unterstützen"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chancen-und-teilhabe-fuer-familien/alleinerziehende> (접속일: 2021.05.13.)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7.01), "Fragen und Antworten zum Kinderbonus", <https://www.bmfsfj.de/bmfsfj/themen/corona-pandemie/finanzielle-unterstuetzung/faq-kinderbonus> (접속일: 2021.05.17.)

캐나다, 포용적이며 페미니스트적인 팬데믹 회복 전략 추진³⁾

- 2021년 3월 셋째 주 현재 캐나다는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3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일 신규 확진자가 9천명을 넘었던 2021년 1월의 2차 유행기를 지나 코로나19 사태가 다소나마 진정의 기미를 보임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길었던 팬데믹이 남긴 경제, 사회적인 상처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 각계에서 다양한 팬데믹 회복 정책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키워드는 포용적(inclusive) 그리고 페미니스트(feminist)적인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월 11일 캐나다 여성젠더평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이하 여성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지만 이러한 고통 또한 여성들은 불평등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 하면서, 연방정부가 1억캐나다달러(약 905억원)의 페미니스트 응답과 회복 자금(Feminist Response and Recovery Fund)을 필요한 기관에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이 재원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성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동안 캐나다 여성들이 일궈 온 진보적 성과들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천명하였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심화된 구조적 불평등을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 팬데믹의 논의에서 페미니스트적 그리고 교차적(feminist, intersectional response to COVID-19)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즉 여성 중에서도 주변화되고 과소대표되는 그룹들, 예컨대 원주민 여성, 흑인 여성 등과 장애인 여성이나 외진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시켜 정책이 다양한 여성들을 경험을 포용(inclusive)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이 자금 지원을 받을 기관 선정에 있어 세 가지 우선적 분야를 발표하였다. 첫째,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근절, 둘째, 여성과 소녀들의 경제적 안정(security)과 번영 증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역할을 독려하는 활동이다. 연방정부는 젠더 폭력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이미 1억캐나다달러를 1,500개 기관에 긴급 투입하여 락다운 와중에서도 안전하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는데, 젠더 폭력 방지 활동은 앞으로도 연방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대응과 회복(Canada's Feminist Response and Recovery

3) 작성: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Summit)이라는 온라인 행사를 개최, 각계의 전문가들과 정치계 인사들이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팬데믹이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논의하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도 주목하여 이주여성, 원주민 여성, 인종화된(racialized) 여성, 돌봄 경제(care economy) 안의 여성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공통적 이면서도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논의하였다.

- 현재 페미니스트 회복 정책 관련하여 캐나다의 학계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유급/무급의 돌봄노동이다. 여성으로 하여금 무급/유급 돌봄노동을 전담하게 하는 젠더규범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은 팬데믹 동안 여성의 경제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요인으로 그간 술하게 언급되어 왔다. 돌봄 노동, 특히 캐나다 여성재단이 5C라고 명명한 직종들, 즉 caring, cashiering, cleaning, catering and clerical work 직종에는 많은 여성들이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캐나다에서 여성의 코로나 감염률이 남성에 비해 높은 원인으로 언급되어 왔다(Bourgeault, 2020). 학계와 시민사회는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 체계(특히 장기요양 시설들)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재검토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부분에서의 정책적 개선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미진하다.
- 육아휴직(parental leave benefit)에 대한 논의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캐나다는 퀘벡주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성공적인 모델을 발전시켰음에도 이를 나머지 주들에 확산시키지 못해 왔다. 팬데믹 동안 퀘벡을 모델 삼아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대다수의 주에서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체계의 한 부분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육아휴직은 고용 정책인 동시에 젠더 평등 정책이면서 또한 돌봄 정책이지만 퀘벡 밖의 주들에서 이러한 돌봄 정책의 관점은 그간 간과되어 왔다(Doucet et al. 2020). 고용 중심의 EI 시스템의 경우 설사 꾸준히 고용상태를 유지 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 자격으로 600시간의 고용(insurable employment) 요구하는 조건 때문에 실질적인 육아휴직의 참여율은 퀘벡에 비해 늘 낮았다. 2017년에도 퀘벡에서는 89%의 여성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반면,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의 9개의 주에서 실질적으로 유급휴가 혜택을 누린 여성들은 평균 65%에 그쳤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락다운이 장기화 됨에 따라 부모들의 실업이 장기화 되고, 이것은 많은 부모들이 고용보험, 그리고 이에 연동되어 있는 육아 휴직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Doucet et al. 2020). 반면 퀘벡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당해 전년의 소득이 2,000캐나다달러(약 180만원)만 되어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어 제도의 진입장벽이 훨씬 낮다. 이에 지난 8월 연방정부는 EI 시스템을 따르는 대다수 주에서 육아휴직 신청 자격을 기존의 6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완화하여 퀘벡처럼 제도의 진입 장벽을 낮추게 하는 조치를 취해 실행 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육아휴직 신청 자격 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임금보전율을 최소 70%로 높여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Atkinson Foundation 2020, Doucet et al. 2020).
- 캐나다의 학계와 시민사회는 보편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늘 해 왔고 팬데믹은 왜 정부가 이러한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1년이 넘어진 락다운으로 원생들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유치원들이 속속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부모들이 아이돌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런 상황은 주변화된 여성들, 특히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고립을 심

화시켰다. 1년 넘게 국경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민자 여성들은 아이돌봄을 분담할 조부모나 친척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들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멈추고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여성의 경제적 참여율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신과 육체 건강은 물론 사회적, 문화적 주변화를 가속시킬 뿐더러 많은 여성들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최근 몇몇 주들이 아이돌봄 기관들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최근 유콘 준주(Yukon Territories)는 허가된 어린이집/유치원등의 유아 교육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일반 원아 한 명당 월 700불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예컨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치원의 전일반 한달 원비가 850불이라면 정부가 700불을 지원하고 보호자가 나머지 150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전일제가 아닌 경우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는 보편적 프로그램이다. 2021년 4월 1일 부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모든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 2년 후에는 기관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유콘 준주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주정부의 지원 확대로 부모들과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또한 개선할 것이라 언급했다.

- 팬데믹에 가장 피해를 받은 집단 중의 하나는 신규 이민자들, 특히 이주여성들이다. 2019년과 2020년 5월 사이 캐나다 태생 비이주민들의 고용률이 7%p, 이주민 남성들의 고용률은 8%p 하락한 반면 이주여성들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12.2%p 하락하였다(Ferrer and Momani, 2020). 이주민 여성들은 또한 팬데믹의 쇼크에서 회복이 가장 더딘 집단이며 이들의 회복이 더딘 이유로는 첫째, 캐나다 출신에 비해 학사학위 소지자가 두 배 이상 많음에도 자국에서의 교육수준이나 경험을 캐나다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둘째, 사회적 자본이나 직능 네트워크에서 소외된다는 점, 셋째, 결과적으로 노동 계약에 기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숙련, 비정규, 고위험 직종에 종사할 확률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FAFIA-AFAI and YWCA Canada, 2020). 온타리오에서 이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OCASI(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 Immigrants)는 세계 여성의날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대응과 회복 행사 발언에서 비공식 부문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들, 특히 청소, 주방, 공장, 요양원 등의 필수적이지만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다수가 이민자거나 유색인종임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유급휴가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무급휴가는 있더라도 생계 때문에 휴가를 감당할 수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캐나다의 시민단체들은 팬데믹 동안 이들 저임금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유급 병가(paid sick leave)를 온타리오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 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이는 입법 단계에서 무산되었고 대신 온타리오 정부는 주민 단체들을 지원하여 확진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Access Without Fear 정책). 요컨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염려 없이 코로나 진단을 받게 하고 확진 시 온타리오주가 이들에게 한 달간의 생활보조금 지원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생활비만 보조해 주면 노동자들의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을 것이라는 주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은 자가격리 해제 후 자신들이 돌아갈 자리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 아예 진단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팬데믹 동안 캐나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추방시켜 온 마당에 주정부가 이민단속기관과 자신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또한 저조한 참여율을 설명한다.

- 이처럼 캐나다의 포스트 팬데믹 재건 정책에 포용성과 페미니즘 지향이라는 합의가 있

음에도 세부 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주변화된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은 미진한 부분이 많다. 특히 캐나다에서 인종주의나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최근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음에도 이러한 논의들이 과연 얼마나 팬데믹 회복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 되었는가는 의문이다. 그나마 아이돌봄 분야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의 추진력을 팬데믹 이후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장기적으로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 참고문헌 •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0.11.25), "Domestic abuse during the coronavirus(COVID-19) pandemic, England and Wales: November 2020",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crimeandjustice/articles/domesticabuseduringthecoronaviruscovid19pandemicenglandandwales/november2020> (접속일: 2021.2.20.)
- Canada's Feminist Response and Recovery(2021.03.08.-09.), "Canada's Feminist Response and Recovery Summit", <https://gesummitfeministrecovery.ca> (접속일: 2021.03.19)
-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2021), "Feminist Response and Recovery Fund and Call for Proposals", <https://women-gender-equality.canada.ca/en/funding/funding-programs/feminist-response-recovery-fund/feminist-response-recovery-fund-about.html> (접속일: 2021.03.19)
- Government of Yukon(2021), "Yukon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Funding Program", <https://yukon.ca/sites/yukon.ca/files/edu/early-learning-child-care-questions-answers-for-families.pdf> (접속일: 2021.03.19)
- Statistics Canada, Labour Force Survey(2020.08.), "Context: COVID-19 restrictions continue to ease", <https://www150.statcan.gc.ca/n1/en/daily-quotidien/200904/dq200904a-eng.pdf?st=jY8i2-3A> (접속일: 2021. 3.19)
- Ivy Lynn Bourgeault(2020.10.14.), "Policy Options, Having more women at decision-making tables would help ensure the gendered effects of the pandemic are fully examined and part of recovery policies", <https://policyoptions.irpp.org/magazines/october-2020/the-missing-voice-of-women-in-covid-19-policy-making/> (접속일: 2021.03.19)
- Atkinson Foundation(2020.07.16.), "Protecting Workers and the Economy Principles for a New Employment Insurance System", <https://atkinsonfoundation.ca/site/uploads/2020/07/Protecting-Workers-and-the-Economy-Memo-to-the-PMO-and-PCO-1.pdf> (접속일: 2021.03.19)
- Ana Ferrer and Bessma Monami(2020.10.21.), "The Startling impact of COVID-19 on immigrant women in the workplace, Policy Options", <https://policyoptions.irpp.org/magazines/october-2020/the-startling-impact-of-covid-19-on-immigrant-women-in-the-workforce/> (접속일: 2021.03.19)
- Andrea Doucet, Sophie Mathieu, Lindsey McKay(2020.10.27.). Redesign Parental leave system to enhance gender equality, Policy Options", <https://policyoptions.irpp.org/magazines/october-2020/redesign-parental-leave-system-to-enhance-gender-equality/> (접속일: 2021.03.19.)
- Government of Canada(2021.02.11.), Government of Canada Invest \$100 Million to Support Women Impacted by Pandemic, <https://www.canada.ca/en/women-gender-equality/news/2021/02/government-of-canada-to-invest-100-million-to-support-women-impacted-by-the-pandemic.html> (접속일: 2021.03.19.)
- FAFIA-AFAI and YWCA Canada(2020), "A Feminist Economic Recovery Plan for Canada: Human Rights Approach",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f0cd2090f50a31a91b37ff7/t/5fd17ce4a9eaf43bd84b44e1/1607564520499/Feminist+Economic+Recovery+Plan+-+Human+Rights+Approach.pdf> (접속일: 2021.03.19)
- OCASI(2020.09.08.), COVID-19 Reconstruction Plan Must Address Systemic Racial Inequalities, <https://ocasi.org/covid-19-reconstruction-plan-must-address-systemic-racial-inequalities>, (접속일: 2021. 3.19)

네덜란드 스토킹 피해 관련 법제도 및 현황⁴⁾

- 작년 12월, 네덜란드 한 소도시에서는 26살 여성이 길거리에서 스토킹자에게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언론이 주목한 바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경찰에 연락했으며, 사건 당일 경찰서에 방문해 담당자와 만날 예정이었다. 경찰에게

4) 작성: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신고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알던 사이였는데, 한동안 가해자에게 불쾌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네덜란드 법률상 스토킹 행위는 범죄로 명시되어 있다. 네덜란드 형법 285b항에 따르면 타인이 특정 행동을 하거나 못하게 강요하기 위해, 또는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 범위는 범죄 행위 빈도, 유형 및 강도에 따라 다양하며, 사회봉사 명령, 벌금형, 또는 최대 3년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네덜란드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웹사이트 상에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체계적으로 요약한 매뉴얼을 만들어 게시하고 있다. 매뉴얼에서는 스토킹이란 무엇인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네덜란드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특히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스토킹자에게 공식 등기우편으로 스토킹 행위를 멈출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경찰이 이 과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와 대화를 멈추고 증거를 수집해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토킹은 피해자의 공식 신고가 있어야 법적 절차를 밟고 기소할 수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신체적인 위협에 처한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자체 권한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검찰 측은 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만약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스토킹가 위협적인 행위를 가하고 있으면 즉시 체포 및 구금하는데, 매뉴얼에서는 스토킹해 왔다는 증거를 수집해 두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바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증거가 부족해 체포가 어려운 일도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경찰 측 데이터에 남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장 체포가 어렵더라도 경찰은 가해자에게 접근하고 대화를 시도하여 스토킹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네덜란드 경찰 측은 대략 절반 이상의 스토킹 가해자들이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난 뒤 가해 행위를 멈춘다고 한다.
- 경찰 신고나 지원 요청 이외에도 여러 행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전화 및 소셜 미디어 접근 금지, 피해자 근처 특정 범위 내 접근 금지와 같은 행정 명령처분도 내릴 수 있다. 만약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고 스토킹 행위가 집 안에서 가정폭력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다. 이 경우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접근금지 명령은 관할 시장의 권한으로 집행되며 가해자는 같이 살던 공간에 머물 수 없고 10~18일간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는다.
- 이 밖에도 경찰이나 정부에서 가정폭력이나 각종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기관인 Veilig Thuis에 연락하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위급상황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가해자가 접근했을 때 눌러서 본인의 위치 정보를 바로 경찰에게 전송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버튼형 기기이다.
- 정부 관계당국의 도움 외에도 스토킹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정부단체들이 있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여러 단체들은 유선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제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들은 웹사이트상에 스토킹을 명백한 범죄로 보고 피해자가 주저없이 연락하고 법적, 제도적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작년에 네덜란드 통계청(CBS)는 12~24세 약 3만 8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보안 및 범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성 청소년 중 3.1%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청소년 응답자 0.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 중 2.8%가 온라인에서 성적(sexual)으로 불미스러운 피해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 역시 남성 청소년의 응답률인 0.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협박, 스토킹, 괴롭힘과 같은 사건의 피해를 경험한 남녀 응답자들의 43.4%는 불면, 분노 등 심적으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온라인으로 협박, 스토킹,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11.3%는 어쩌다 발생한 일이라고 응답했고, 7.5%는 피해를 경험한 본인 스스로를 탓하는 응답을 선택했다. 명백히 잘못된 범죄라고 응답한 사람은 4.1%에 불과했다. 그리고 피해를 경험한 이후 해당 사건을 알린 대상은 가족, 친구 또는 선생님인 경우가 36.7%로 가장 높았으며, 경찰이나 유관기관에 알린 경우는 8%에 그쳤다. 공식적으로 경찰에 범죄 피해로 접수한 경우는 매우 낮은 4.8%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에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틀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통계상 스토킹이 범죄로 인식되고 피해자가 관계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스토킹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 관계당국이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이다.

• 참고문헌 •

- CBS (네덜란드 통계청) (2020.01.10), "Girls more likely to be harassed, stalked online," <https://www.cbs.nl/en-gb/news/2020/02/girls-more-likely-to-be-harassed-stalked-online> (접속일: 2021.04.26.)
- Politie (네덜란드 경찰 공식 웹사이트), "If you are being stalked: Information for victims of stalking," <https://www.politie.nl/binaries/content/assets/politie/onderwerpen/slachtofferzorg/vertaalde-folders/19049-def-stalking-brochure-a5-eng-digi.pdf> (접속일: 2021.04.26.)
- RTL Nieuws (2020.12.11.), "Doodgestoken vrouw in Venlo werd al een tijd gestalkt," <https://www.rtlnieuws.nl/nieuws/nederland/artikel/5202745/stalker-venlo-dodelijke-steekpartij> (접속일: 2021.04.26.)
- Slachtoffer Hulp Nederland(2021), "Straf bij stalking," <https://www.slachtofferhulp.nl/gebeurtenissen/stalking/straf-bij-stalking/> (접속일: 2021.04.26.)

네덜란드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 제도 개황

-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족 구조 및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관련 제도나 정책도 이런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다양한 가족 유형 중에서 한부모 가족에 초점을 두고 네덜란드의 한부모가족 현황과 제도적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우선 네덜란드의 한부모가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초 기준 네덜란드 거주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 340만명 중 54만 명 가까이가 한부모가족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자녀인 아동·청소년 비율은 2009년 13.4%에서 2019년 16%로 증가했다. 참고로 가고 분류 유형

중 결혼한 부모하에서 자라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62.2%로 가장 높았고, 사실혼인 파트너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19.7%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파트너로 동거하며 살아가는 사실혼 가족의 형태도 한국에 비해 훨씬 흔한 편이다.

- 지역적 분포로 나누어 고려했을 때 격차가 큰 편이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헤이틀런(Heerlen)과 로테르담(Rotterdam)의 경우 전체 아동·청소년의 약 29%가 한부모 가족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 명당 한 명 수준이다.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단 4%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89%는 행정상 ‘모’를 가구주로 하는 가구에 등록된 모자 가족의 형태로 나타났다.
- 경제참여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을 고려했을 때, 네덜란드 통계청(CBS)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부모가족(15~74세) 중 노동 인구 및 비노동 인구를 합치면 총 481,000명(남성 101,000명, 여성 380,000명)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이면서 정규직 근로자인 노동인구는 총 242,000명(남성 54,000명, 여성 189,000명)으로 나타났고 자영업 근로자는 총 52,000명(남성 20,000명, 여성 32,000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에서는 정규직 또는 자영업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일하는 사람 중 여성 비율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네덜란드에는 한부모가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Law on Improving Lone Parents' Labour Market Position, Wet verbetering arbeidsmarktpositie alleenstaande ouders)이 제정되어 있다. 본 법의 주요 취지는 한부모의 원활한 자녀 양육 및 노동참여 활성화로, 양육과 경제활동 두 영역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방향이 수립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사회부조 수령 시 행해야 할 의무 조항을 담고 있는 노동시장 참여법(Participation Law, Participatiewet) 일부를 완화 적용 또는 유예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6년간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정부에서는 여러 유형의 공공부조 보조금을 지원할 때 기혼/사실혼 가구,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기혼/사실혼 가구의 경우 보조금 산정 시 소득 심사에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월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100% 적용하는 반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임금의 70%만 적용하고 자녀 복지수당(child budget, kindgebonden budget)에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네덜란드의 2021년 월 법정 최저임금은 1,684.8유로다(한화 약 228만 7천원). 자녀 복지수당은 일정소득 이하인 가구에 정부에서 1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월 수령금액은 수입, 자녀 수, 자녀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된다.
- 한부모 가족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보조금을 받는 부 또는 모인 경우, 시간제(part-time)로 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021년 기준 월 최대 220유로(한화 약 29만 8천원)대에서 최대 6개월간 임금의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세 이하라면 6개월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2021년 1월 기준 최대 137.46유로(한화 약 18만 7천원) 내에서 최대 30개월간 임금의 1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만약 한부모가족의 부모가 질병, 임신, 출산 등과 같은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임금의 15%를 공제받으며 2021년 1월 기준 최대 139.41유로 내에서 임금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액공제 혜택과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으나 따로 기한 제약이 없어 필요한 기간 동안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부모인 동시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부모 가족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 중인 경우, 교육 지원 명목으로 월 266.52유로(한화 약 36만 2천원)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 4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학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교육 보조금인 셈이다.
- 위에서 살펴봤듯 네덜란드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가 크게 자녀 양육과 부모의 일·학업 두 분야 모두 고려하고 개별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국가별로 정책 방향, 예산, 사회적 맥락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사례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 추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고려할 때 네덜란드 사례도 참고할 만한 것이다.

• 참고문헌 •

- CBS(2020.01.23.), "Almost 1 in 6 children live in single-parent households", <https://www.cbs.nl/en-gb/news/2019/52/almost-1-in-6-children-live-in-single-parent-households> (접속일: 2021.05.27).
- CBS(2021.02.16.), "Labour participation; position in the household", <https://www.cbs.nl/en-gb/figures/detail/82956ENG?q=single-parent#shortTableDescription> (접속일: 2021.05.27).
- DUO(네덜란드 교육문화사회부), "Alleenstaande ouder", <https://duo.nl/particulier/alleenstaande-ouder.jsp> (접속일자: 2021.05.27).
- European Commission (2015). "Support to Lone Parents. Comments Paper-The Netherlands".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84654762_Support_to_lone_parents_in_the_Netherlands (접속일: 2021.05.27).
- Gemeente Amsterdam, "Alleenstaande ouder met een bijstandsuitkering - inkomsten en heffingskortingen", https://www.amsterdam.nl/veelgevraagd/?productid=%7B454846C3-1E07-4475-8A01-8AD63A1A5AE1%7D#case_%7BE7B19FF8-E597-452F-87A0-D0DAFA797716%7D (접속일: 2021.05.27).
- Rijksoverheid (네덜란드 정부), "Hoe hoog is mijn bijstandsuitkering?",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bijstand/vraag-en-antwoord/hoe-hoog-is-mijn-bijstandsuitkering> (접속일: 2021.05.27).

스위스, 기업 내 여성임원 할당제 발효⁵⁾

- 지난 2019년 6월 19일, 스위스 연방 상원에서는 스위스 기업 내 여성임원 할당제를 포함하는 기업법(the Swiss corporate law)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여성임원 할당제를 포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2013년에는 있었지만 논란 끝에 수포로 돌아갔고, 2016년 말부터 다시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쟁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또한 하원에서는 찬성 95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단 1표 차로 가까스로 통과했다. 반대 측에서는 기업은 성별에 관계없이 특정 요건이나 자격에 부합하는 리더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스위스 기업법 일부 조항에 포함된 여성 대표성 의무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기업법은 스위스 내 기업들이 5년 내 이사회(boards of directors)에 여성임원 비율 최소 30%, 10년 내 상임이사회(executive boards)에 최소 20%를 달성할 것을 의무화했다. 해당 법 조항은 올해 1월자로 발효되었다. 그리고 2021년 3월 현재, 스위스 주요 기업 내 임원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

5) 작성: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스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주 증시 지수인 스위스 시장 지수(Swiss Market Index, SMI) 20개 기업 내 임원 성비를 조사한 결과 약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임원 할당제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 그 대상이다. 스위스 시장지수(SMI)에 상장된 기업으로, 1) 재무상태표 연간 2천만스위스 프랑(한화 약 241억원)이상, 2) 연간 판매 매출이 4천만스위스프랑(한화 약 482억원)이상을 기록하는 기업, 3) 연간 평균 250명 이상 풀타임(full-time) 피고용자를 둔 기업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기업이 여성임원 할당제 이행 대상이다.
- 여성임원 할당제가 추진되었지만 남아있는 문제는 바로 목표 미달성에 따른 제재 조치가 따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법에서는 최소 여성임원 할당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연례 기업보고서에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제시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 내 여성임원 비율 현황은 2026년, 상임이사회는 2031년부터 연례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보 공시 이행 적용 시점이 5~10년 이후인 것이다.
-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인 Russell Reynolds에서는 지금 이 정도 추세라면 모든 스위스 시장 지수(SMI) 상장 기업에서 상임이사 여성 비율 20%를 달성하는 데 20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스위스 시장 지수(SMI) 상장 기업 임원직에 5명의 여성 임원이 임명되었는데, 1명만 남고 4명은 해가 바뀌기 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위스 시장 지수(SMI) 상장 기업에는 17명의 여성 임원이 있고, 여성 CEO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스위스 한 컨설팅 업체 Guido Schilling가 발표한 보고서(Schilling Report)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019년 10%에서 2020년 13%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위스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이번 보고서는 스위스 내 119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연방 정부 및 26개 주(canton) 내 직책을 조사한 결과이다. 총 891개 임원, 841개 감독 이사회 임원(supervisory board members), 1,031명 공공 분야(public sector) 매니저가 조사 대상이었다.
- 스위스 주요 대기업 내 임원직급에서 여성 비율은 21%에서 26%로 상승했으며, 공공 부문은 그 비율이 2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주요 기업 내 감독 이사회에서 여성비율은 23%에서 24%로 1% 상승했다. 그리고 집행이사회 내 여성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기업 수는 47%에서 42%로 감소했다. 해당 보고서는 스위스에서 여성 임원 비율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 말 전에 목표치 2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스위스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 수치뿐만 아니라 여성 임원의 직무 부분에도 주목했다. 보통 인사, 법률 부분에 집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성 임원의 담당 영역이 재무같이 기존에 여성이 드물었던 분야까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기업이 42%에 이르며 이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여성의 임원 대표성 향상을 위해 조직된 비영리 단체인 'European Women on Boards'(EWoB)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여성 이사진 현황을 평가하는 젠더 다양성 지수(Gender Diversity Index, GDI)를 발표하고 있다. 젠더 다양성 지수(GDI)는 국가 내 기업 일부에서 이사회, 경영진, 이사회 의장, CEO와 같이 기업 내 주요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취합하여 국가 총 점수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 2020년도 젠더 다양성 지수(GDI) 발표 결과, 스위스(51개 기업)는 1점 만점에 0.39점을 기록했다. 이는 18개국 중 17위로, 폴란드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1위는 0.74점을 받은 노르웨이(15개 기업), 2위는 0.67점을 받은 프랑스(83개 기업), 3위는

0.64점을 받은 영국(151개 기업)이었다.

- 스위스 기업 리더십 직책에서 여성 대표성은 아직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평균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평가 대상 국가 평균보다 8%p 낮았다. 또한 2019년에 비해 조사 기업 17%에서 젠더 다양성 지수(GD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020년 모두 평가 대상이었던 기업들 중 2019년에 비해 젠더 다양성 지수(GDI)가 상승한 곳은 55%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 올해 1월 여성 임원 할당제가 추진되기 시작한 만큼, 아직 해당 법이 미친 영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행 및 정보 공시 하기까지는 아직 몇 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 임원 할당제가 스위스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European Women on Boards(2021), "Gender Diversity Index 2020", <https://europeanwomenonboards.eu/wp-content/uploads/2021/01/Gender-Equality-Index-Final-report-2020-210120.pdf> (접속일: 2021.03.26.)
- Guido Schilling(2021) Media Release: schillingreport 2021. <https://www.schillingreport.ch/en/media-release/> (접속일: 2021.03.26.)
- Library of Congress, the United States(2020.09.30.), "Switzerland: Gender Quotas for Boards of Large Companies to Take Effect January 1, 2021", <https://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switzerland-gender-quotas-for-boards-of-large-companies-to-take-effect-january-1-2021/> (접속일: 2021.03.26.)
- Swiss Capital Markets Law(2020.11.10.), "Change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rporate Law Reform: Gender Quotas and Say-on-Pay", <https://www.cplaw.ch/2020/changes-for-listed-companies-under-the-corporate-law-reform-gender-quotas-and-say-on-pay/> (접속일: 2021.03.26.)
- Swissinfo(2019.06.19.), "Parliament approves quotas for women on company boards", https://www.swissinfo.ch/eng/minimum-representation_parliament_approves_quotas_for_women_on_company_boards/45042736 (접속일: 2021.03.26.)
- Swissinfo(2021.03.02.), "Women still struggling to enter Swiss boardrooms", <https://www.swissinfo.ch/eng/women-still-struggling-to-enter-swiss-boardrooms/46413030> (접속일: 2021.03.26.)
- Swissinfo(2021.03.05.), "Gender equality continues to make progress in Swiss workforce", <https://www.swissinfo.ch/eng/gender-equality-continues-to-make-progress-in-swiss-workforce/46423152> (접속일: 2021.03.26.)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확산 추진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야기된 성차별적 면접 논란을 계기로,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요인을 해소해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여성가족부는 채용 각 단계별로 성차별적인 채용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사례를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3월 말까지 경제단체,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
-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할 계획
- 고용노동부는 구인광고에 대해 성차별 유무를 모니터링하고('21년 13천 개소),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운영 및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1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65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제고하고, 청소년 쉼터 강제 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연간 10만 4천여명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1~18세)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선별적으로 지원 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상 지원 대상을 확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67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안이 3월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법 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인신매매 등 방지 및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
-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권익보호기관 등을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LOIOMSBlledyLm+xH00RBgc0.mogef11?mid=news405&bbsSn=707679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9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청년 여성들과 함께 ‘20·30 청년 여성의 일과 삶 간담회’를 가짐.
-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에 계속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3.24.]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_NT_SEQ=364222

한시적 양육비 회수 실행력 제고와 양육비 소송 간소화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과 함께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6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함.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총 6,680건, 839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해 양육비 이행률이 21.2%에서 36.1%로 증가
-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도입 등 비양육부모의 책임성 강화
- 한시적양육비 지원액에 대한 국세 강제징수 준용 관련 실행계획,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양육비 관련 소송 간소화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2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68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 점검 기능 강화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 및 운영함.
- 해당 과에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총괄·점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와 인식개선 홍보 추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3.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85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강화 도모

-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함.
- 불법촬영 탐지기술 개발·보급, 범죄통계 분석과 지리적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별 대응
-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 보완, ‘스토킹전담조사관’ 지정·배치
-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 마련 등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등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0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97

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거짓·과장 광고 처벌대상 확대

-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를 실시함.
- 여성가족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받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무등록업체의 온라인상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0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98

포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 모색

- 여성가족부는 ‘포용적 가족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에는 한국한부모연합 등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현행 제도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0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07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0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0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10

‘가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가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현재 국회에는 가족의 정의 확대,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가족”으로 변경,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상태
- 개정 법률안은 혼인과 혈연 중심의 관점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우리 법과 제도는 1인가구, 노인가구, 동거가족 등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가족을 ‘비정상가족’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1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23

‘인공지능(AI) 분야 양성평등 정책 확산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인공지능(AI) 분야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인공지능(AI)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공지능(AI) 챗봇(‘이루다’)의 성별 고정관념 학습, 성차별 및 장애인 차별과 혐오 표현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 해소에 초점을 두고 진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1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함.
-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1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29

청년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모색

- 여성가족부는 ‘과학의 날’을 맞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족한 과학기술인력 수급 문제와 성별업종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에서는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교육부 통계)과 여성과학기술인 온라인 성장지원 플랫폼(W-브릿지)의 운영 현황에 대한 발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과학기술분야 여성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논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2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736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2021년 4월 20일(화)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 개념 정의, △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 등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2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533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1년 계기, 현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2020년 4월 23일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1년을 맞아 그간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함께 최근 디지털 성범죄 양상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제2의 엔(n)번방’으로 불리는 유사 범죄의 발생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과 처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2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743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수립

-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 27일(화)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함.
- 제4차 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였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증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 강화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2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50

기술 분야 성평등 증진 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4월 28일(수) 오후 3시 주한핀란드대사관과 함께 ‘여성, 기술과 혁신(Women in Tech)’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함.
-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과 핀란드의 성평등 및 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업가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 분야의 여성 현황, 향후 개선방안 등 논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2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52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를 열어 스톱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4.20. 공포, 10.21. 시행)됨에 따라, 스톱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논의
- 여성가족부는 스톱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톱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 우선 제공을 결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2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53

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정책과 문화 확산

- 여성가족부는 4월 30일(금) 오후 2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산시 북구 소재)에서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개소식을 개최함.
- 이번에 문을 여는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는 지역 사회 양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포괄하는 성주류화 제도 지원,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2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59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1차 정책 개선 권고

- 여성가족부는 2020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환경보전 종합계획,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2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함.
 - 국민환경보전 기초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우선관리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생산하는 한편,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환경부에 권고
 -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력 촉진 방안 마련,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5.1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84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

- 여성가족부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가족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함.
 - 올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하였고, 신청 기업 총 22개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9개 기업을 지정
 -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 보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5.1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98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전국 10,9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15년에 비해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30.4%(15년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31.7%(15년 44.2%)로 크게 감소
 - 가족의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한 수용도가 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20대의 절반 정도가 비혼 독신(53%), 무자녀(52.5%)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족 형태 및 생애주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5.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830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는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

- 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 방안 마련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 단축
-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6.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HvIOPGysVEn8ErMsSe-2298b.mogef21?mid=news405&bbtSn=707856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분과 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는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개최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함.
- 정부는 집결지가 모두 폐쇄될 때까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노력하는 한편, 탈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
-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라인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 온라인 성매매 단속·점검 강화 △ 피해자 보호 △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등 추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6.1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HvIOPGysVEn8ErMsSe-2298b.mogef21?mid=news405&bbtSn=707862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힘.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관리 제고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 강화
-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관리 방안과 어린이집 내 감염병 의심 영유아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사유에 반영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 도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3.30.]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 NT_SEQ=364327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 지원

-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힘.
-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원을 지원하여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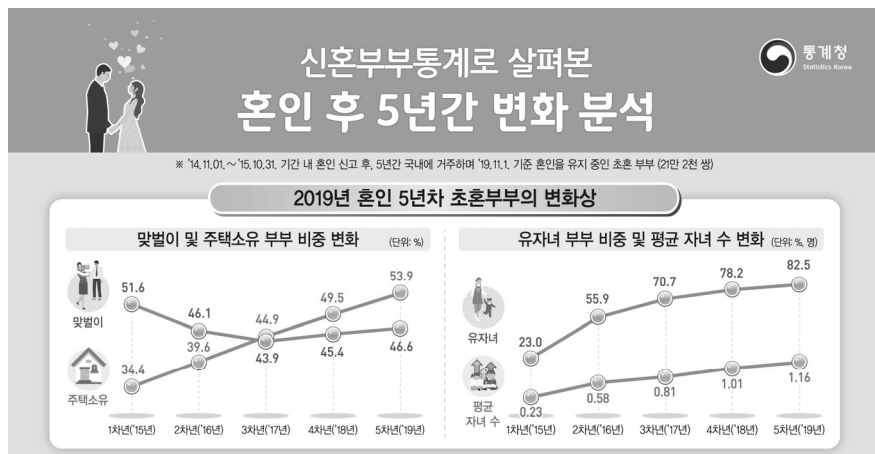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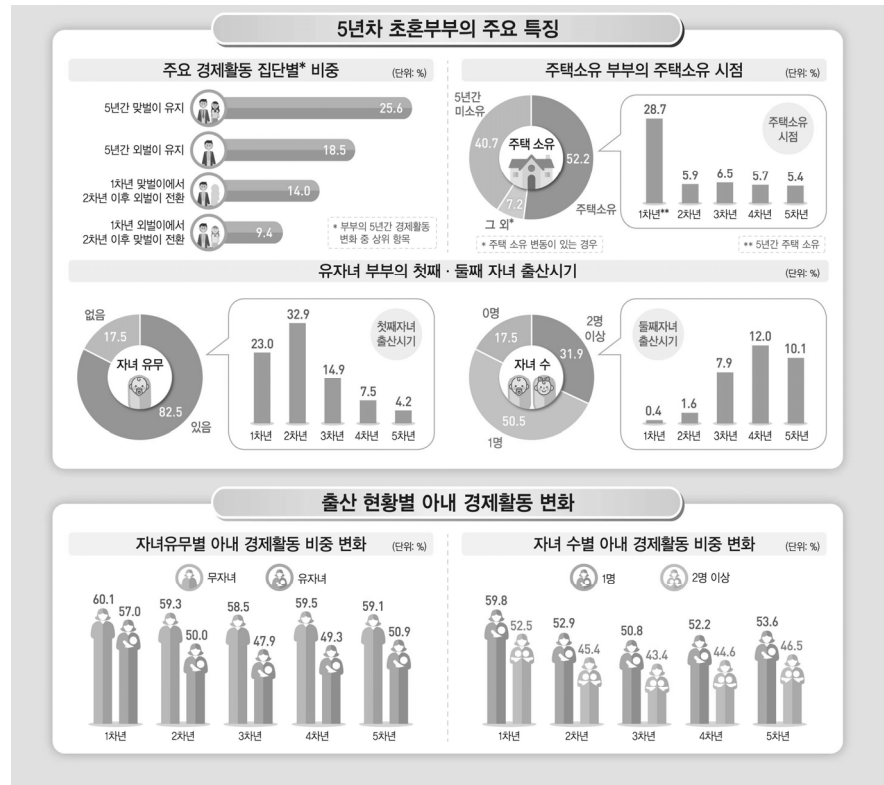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 00008&nttlId=83954

[통계청]

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 통계청은 신혼부부의 출산·경제활동·주택 소유 현황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출산 변화와 경제활동·주택 소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통계청 보도자료, 2021.04.25.]

• 참고문헌 •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9268